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나몰라라'

45% 총수입중 법인전입금 1% 미만
총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54.7%

사립대학 법인들이 설립자로서 재정적인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정부의 입학금 폐지 추진에도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30일 대학교육연구소가 2015년 사립대 153곳(일반대 및 산업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 총수입중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인 법인전입금 비율은 4.4%에 불과하다. 2011~2014년 법인전입금 비율 역시 3.9~4.7%에 그쳤다.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최근 5년간 50만~66만원 수준이었다. 2015년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60만4000원으로 학생 1인당 등록금(734만원)의 8.2%에 불과하다.

2015년 사립대학 총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54.7%인 것을 고려하면 사립대학 법인의 재정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 등을 확보하고 대학운영 경비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대학별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법인전입금 비율이 1%도 안되는 대학은 153곳중 68곳으로 45%에 육박한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법인전입금 비율이 4.5% 미만인 대학은 총 121곳으로 80% 가까이에 달한다. 2015년 전국 평균 법인전입금 비율이 4.4%였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대학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법인전입금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4.5% 이상인 대학은 32곳(20.9%)에 그쳤다.

이 때문에 사립대학 법인들이 교원 인사권, 등록금 인상 의결권 등 상당한 학교운영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재정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최근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분을 등록금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교육부의 정해진 지침을 강요하는 형식적인 합의였다"며 입학금 폐지 최종합의 결렬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등 명분 쌓기에만 급급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일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사립대학들과 입학금 단계적 폐지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이 이달 20일 대표단 회의에서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분을 등록금 인상 등을 통해 메우고 싶다고 밝혔고 이를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최종합의가 결렬됐다.

이에대해 참여연대는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입학금 산정기준과 절차, 사용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입학금 강제 폐지 추진, (입학금 폐지에 동참하지 않는 사립대를 대상으로)재정지원 차등을 두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입학금 폐지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 국회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입학금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대학생들도 "명분없는 사립대 입학금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26개 대학 총학생회가 발족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분을 등록금으로 보전해 달라고 요구해 합의를 결렬시킨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총협은 다음달 2일 교육부가 구성한 '대학, 학생, 정부 간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 회의에는 사총협 대표단 3명을 비롯해 학생 대표 3명, 교육부가 참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총협이 다음달 2일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뉴시스

상고대 감상하는 등반객 30일 한라산 영실 탐방로 일대 기온이 올들어 최저인 영하 1.5도로 떨어지면서 첫눈이 내린 가운데 등반객들이 나무에 활짝 핀 상고대를 보며 남국의 겨울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석탄화력 먼지 배출허용기준 2019년부터 최대 2배 강화

철강·정유·시멘트 등 미세먼지 다량업종도 적용

석탄화력발전소과 철강·정유·시멘트 등 미세먼지 다량업종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최대 2배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40일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개정작업을 통해 오는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저감하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중 77%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국내 사업장중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40%로 높은 이들 업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사업장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강화 수준을 정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먼지 배출허용기준이 20~25mg/㎥에서 10~12mg/㎥으로 약 2배 높아지며 황산화물의 경우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1.7배,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약 2배씩 강화된다. 폐지 예정이거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는 제외된다.

제철·제강업은 먼지가 30mg/㎥에서 20mg/㎥, 황산화물의 경우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4배 강화된다.

석유정제업에 대해서는 먼지는 30mg/㎥에서 15mg/㎥, 황산화물의 경우 180ppm에서 12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

시멘트 제조업에 대해서는 먼지는 30mg/㎥에서 15mg/㎥, 황산화물의 경우 30ppm에서 15ppm으로,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호주 일부 농장서 현대판 노예 노동 폭로

호주 농장의 현대판 노예 현장을 고발하기 위해 위장 취업한 말레이시아 기자가 "종교적으로 세뇌당했으며, 농장에 계속 잡아두기 위해 빚더미에 앉게 했다"고 폭로했다.

30일 가디언에 따르면 사이풀 하삼 우투산말레이시아 일간지 기자는 지난해 지난 2주간 호주 빅토리아 주 스완 힐 과일농장에서 불법 노동자로 일하며 "천 가지의 슬픈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주로 과일을 따는 일을 했다.

하삼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일하는 과일농장 근로자들은 높은 임금을 약속받고 채용된다. 하지만 농장에 도착해서는 훨씬 적은 돈을 받으며, 초만원인 숙소에 터무니 없는 집세를 내도록 강요받는다. 결국 빚더미에 앉게돼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하삼은 4일 동안 24시간 근무하며 110달러(약 12만원)를 받았다. 그 중 80달러는 집세로 냈고, 중개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달러를 건넸다. 수중에 쥘 수 있는 돈은 20달러에 그쳤다.

그는 "이는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그들은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다. 집세가 해결되면 음식을 사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한다"며 "내 경우엔 딱 집세를 내고 음식을 사면 끝이다. 매우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이것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14세 러시아 모델, 中서 과로사 추정 사망

최근 중국의 한 패션쇼에 오른 러시아 출신 10대 모델이 과로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노예계약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러시아 모델 브라다 쥬바(14)가 최근 상하이패션쇼에 일하다가 숨진 가운데 중국 모델 에이전시인 'ESEE 모델' 측이 과로사에 따른 사망, 노예 계약 체결 등 주장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전날 러시아 시베리안타임스와 영국 데일리메일 등은 쥬바가 최근 상하이에서 일하다가 과로사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쥬바는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한 패션쇼에 출연해 무대 뒤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고열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이후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서방 언론은 "쥬바에게 뇌수막염 증세가 있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아 아무도 알지 못했으며 극도의 피로가 합병증을 일으켜 숨졌다"고 밝혔다.

러시아 언론 등에 따르면 또 쥬바의 엄마는 자신의 딸은 매우 건강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숨졌다고 밝혔다. 쥬바의 엄마는 딸이 숨지기 전 전화통화에서 "너무 피곤하다. 푹 쉬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모델 에이전시는 딸에게 의료보험에도 가입해 주지 않아 치료에 지장을 줬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진 가운데 모델 에이전시 'ESEE 모델'은 쥬바가 숨진 이틀만인 29일 성명을 통해 쥬바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과로사, 노예계약 등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쥬바의 치료 등에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울러 일부 언론 매체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상하이 패션계를 모독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리비아 벵가지에서 총상 시신 36구 발견

유엔리비아지원팀(UNSMIL)은 29일(현지시간) 리비아 동부도시 벵가지에서 발견된 36명의 피살자 시신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UNSMIL는 이날 소셜 미디어에 "이들을 살해한 범인들을 즉각 색출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 지원군 부대는 아비야르 비역에서 발견된 36명의 시신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라는 명령을 휘하 부대원들에게 28일 내렸다.

벵가지에서 남서쪽으로 50km 떨어진 아비야르 지역의 주민들은 이 시신들이 외딴 지역에 묻혀있었고 모두 총상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군 소식통이 전했다.

벵가지에서는 2016년 7월에도 벵가지 사회복지기금 본부에서 가까운 곳에서 수갑을 찬 채 살해된 시신 14구가 발견된 적이 있다.

또 10월에도 벵가지의 군 감옥에서 고문과 총상 흔적이 있는 10명의 신원미상자 시신들이 발견되었다.

뉴시스